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How to Lead North Korea to an Open Society —

第 3 回 國際學術會議 發表論文集

1993. 10. 18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세계는 지금 반 세기에 걸친 냉전시대를 마감하면서 이념과 체제의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화합의 새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모색되는 가운데 남북한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문제가 지대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둘러싸고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키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주변 4강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변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1993년 10월 18일 「北韓 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이라는 주제로 제3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對北韓 政策을 발표한 4편의 논문과 국내학자들의 토론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발간과정에서 토론내용의 일부는 재편집을 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북한을 開放社會로 유도하기 위한 학문적 성찰의 유익한 계기가 되고 나아가 남북한 관계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3. 12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目 次

序 文

開 會 辭	李秉龍	1
基 調 演 說	韓完相	3
I. 第1會議：美國·日本の 對北韓政策		11
1. 美·北韓關係：不確實한 未來	Robert A. Scalapino	13
2.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一考	Hisahiko Okazaki	31
3. 討 論	李基鐸, 朴慶緒, 玉台煥	39
II. 第2會議：中國, 러시아의 對北韓政策		55
1.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統一에 대한 見解	李 琮	57
2. 「平和政策」의 再開： 對北開放 誘導方案	Alexander Zhebin	72
3. 討 論	河龍出, 朴斗福, 崔宜喆	80
III. 第3會議：綜合討論—向後 對北韓政策 推進方向		101
附 錄：會議概要		117

開 會 辭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北韓 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이라는 주제로 제3회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국내의 학자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현재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역사적 대변혁을 경험하였습니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시작된 세기적 변혁은 소연방의 몰락과 해체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냉전체제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탈냉전의 조류와 더불어 이제 양극체제로 갈라져 싸우던 시대는 지나가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호의존적 신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대결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유보한채 핵무기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南北韓은 이제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繁榮을 위한 同伴者가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대립과 반목의 자세를 버리고 함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共存共榮과 和合의 새질서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을 살펴볼 때 통일의 기회

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이에 새정부는 합리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설정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北韓社會의 變化와 開放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저희 연구원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저명 학자들을 모시고 한반도 주변4강의 協力關係를 통하여 北韓이 改革·開放의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北韓 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학술토론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개회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基 調 演 說

韓 完 相
副總理兼 統一院 長官

오늘 [북한 開放에 대한 주변 4강의 立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基調 演說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신정부의 통일정책과 주변국의 役割에 관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945년 알타에서 시작되어 반세기 가까이 전세계를 지배했던 冷戰體制는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으며, 그 해체에 따른 결과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전체제 와해 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은 이들 국가내의 民族間 갈등과 宗派間 분규를 초래하여 內戰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사태가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반면, 냉전체제의 해체는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동·서독의 통일과 예멘의 통일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民族과 宗派間 대립과 무력 충돌의 본보기였던 이스라엘과 PLO는 마침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和合의 場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탈냉전 기류 속에서 민족통일의 好機를 맞고 있

습니다.

해방이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과 역사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分斷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vision)과 지혜가 한민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한반도 안으로 돌려보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아직도 냉전 현실의 장벽이 엄연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냉전체제, 냉전제도, 냉전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아직도 不信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대결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의 뒤편에서 냉전의 孤島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최초 祭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냉전의 마지막 遺物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 역사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탈냉전의 흐름과 개혁정치의 기운에 발맞춰 신선한 改革의 바람이 남한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되는 신한국 건설의 운동이요, 개혁정치의 바람입니다.

참다운 개혁은 正統性을 가진 정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정통성 있는 文民政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내적 기반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 개선을 보다 정당하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

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내적 기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개혁정치는 또한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통일을 위한 강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통일방안의 골격을 살리면서 작년 초 남북한간에 채택,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의 약속을 함께 수용하는 가운데, 漸進的이며 段階的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해 가려고 합니다.

즉,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한국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3단계 통일구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적 국민합의]와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세가지 기본정신 혹은 基調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존과 공영의 정신입니다.

남과 북이 對立과 反目的의 자세를 버리고 자유와 풍요를 함께 누리며 공존하고, 나아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정신입니다.

[공존공영]의 基調는 몇가지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기조는 남북이 그동안 상대방에 대하여 지녀왔던 냉전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남과 북이 먼저 상대방의 實體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사상과 제도가 자기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打倒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정신은 남북관계에서 零合(Zero-Sum)의 관계를

止揚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런 뜻에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어느
一方이 다른 한쪽을 吸收하는 방식의 통일을 한국정부는 바라지
않으며, 또한 이를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셋째, [공존공영]의 정신은 국제사회에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거
나 봉쇄하는 정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동참하도록 도와주는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共助가 필요하다는 것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거나 제재하자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공존공영은 민족적 공조와 더불어
국제공조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
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주변4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眺望해 보고 그 관계를 향상시
킬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한
국정부의 北方政策은 구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수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북대화 재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간 [기
본합의서]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孤立
을 초래하고 북한의 대내외적 硬直性を 제고시킴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로 작용한 점을 우리는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하였던 바에 따른 明示的 결과(manifest function)는 아니었습니다(latent dysfunction).

냉전시대 주변국의 대북한정책은, 구소련과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쌍무간 동맹조약에 의해 정치 군사적 유대를 견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구상하에 북한을 당시 주요 적대국이었던 소련의 友邦으로서 인식하고 대북한 봉쇄정책을 견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정책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의 수교이후 정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통적 정치 군사관계의 급작스런 수정에는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의 진전 속도에 맞추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대두이후 미·일 양국은 다분히 否定的 시각에서 대북한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탈냉전시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동북아질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반도정세와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이 아닌 [참여정책]을 구사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간에 진정한 의미에서 平和共存 상태를 모색하고 이를 정착시켜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한민족의 共榮

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호신뢰는 남북한간 상호접촉을 확대하고 대화와 협력의 場을 넓혀 나감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대북한 [참여정책]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 작업에 북한을 동참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때로는 強硬하게, 또 때로는 宥和策의 모습을 띠고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뿐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유념해야 할 점은 대북정책이 북한의 고립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어려움은 북한이 갖고 있는 Cultist State의 非이성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외부로 부터의 압력은 북한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 줄 것이며 그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그 체제의 비이성적 성격은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주 Waco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1호」라는 미사일과 막강한 재래식 무기를 갖춘 Cultist State인 북한은 Waco의 비극보다 더 엄청난 불행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 점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option)을 북측에 제공하는 정책이 오히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냉전적 [封鎖정책]이 아닌 탈냉전적 [參與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율에 익숙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북측에 심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대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될 때, 남북한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가능해 지고, 한반도에 긴장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과 남한 뿐아니라 국제사회가 共存하면서 共榮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 통일 은 평화적으로 착실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에도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투명성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핵투명성 보장없이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이룩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여러분들의 열띤 논의와 대화가 북한의 合理的 選擇을 유도하고, 나아가 분단한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빈 면

第1會議

美國，日本の對北韓政策

빈 면

美·北韓關係：不確實한 未來

Robert A. Scalapino

버클리大 教授

폐쇄된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을 수 밖에 없다.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까? 공표한 것과 사실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주장하는 것과 의도한 바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념적 경직성이나, 이른바 국가이익이라고 인식되는 것, 그리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등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북한이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란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북한을 꾸준히 연구해온 전문가들조차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은, 또는 이와 관련된 질문 등에 대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답변을 구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간직한 채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으뜸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어떤 이득을 획득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의 선택이 내포하고 있는 손실과 이득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다양한 접근법들을 실험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 방법이다. 과거 미국과 북한은 오랜 기간동안 최소한의 접촉만을 유지했었다. 한국전쟁이후 중국과 소련간의 균열이 심

각해지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이들 사이의 완충국의 입장에서 등거리 외교를 적당히 벌이고 있을 때 미국은 방관자의 입장에 서있었다. 사실은 북한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는가 싶다가도 이어 또다른 상대방으로 기울는 등 결코 어느 한 쪽도 신뢰할 수 없었으며 항상 異民族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 그 어느 나라와도 자신들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 및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란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간의 관계였을뿐 간헐적인 선전 목적 이외에는 결코 인민 대 인민간의 관계는 아니었다. 반면에 미국은 남한에 대한 강력한 방위공약을 대체로 준수하였고 과거 남한의 정치정세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광범한 경제 및 문화교류를 촉진해왔다. 지난 80년대 초반 비록 북한 방문이 성사되기는 했으나 재미 한인동포사회를 비롯한 일반 미국 시민들조차 극히 제한된 접촉만이 있었을 뿐이다.

1970년대를 계기로 국내의 정세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이익에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주요 전개 양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간의 화해로서 이는 이미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비록 간헐적인 위기가 있었으나 19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양국간의 경제 및 전략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는 점, 그리고 소련의 붕괴 및 사실상 북한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 러시아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채택으로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된 점, 미소간의 관계가 대결에서 화해로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 냉전의 종식, 그리고 이러한 관계 발전과 더불어 남한의 극적인 북방정책의 성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립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외부로부터 믿을만한 지원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동시에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스탈린식의 경제전략의 취약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자력갱생은 지속적인 과학 기술발전에 의한 개혁의 시기에는 그 의미가 급속히 미미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지는 반면에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는 북한의 막대한 군비지출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보여온 적대정책에 새로운 수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서 1989년 가을 북한에 새로 설립된 평화군축연구소는 일단의 미국인들을 개인 자격으로 초청하였다. 이들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좌익계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는 무모한 것임이 이미 밝혀졌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북한간의 관계와 관련한 광범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장차 미국인들과 양국간 또는 국제 회의에서 서로 교류하자는데 양측이 점차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돌렸다. 1990년 가을 가네마루의 평양 방문에 힘입어 일본과 대화를 개시할 북한측 의지가 표명되었고 한동안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같이 보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쇠퇴하면서 경제개혁을 위한 계획들이 재차 논의되기도 하였다(앞서 7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중반 몇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무위로 종결됨). 경제특구, 해외투자 및 남한 재벌기업들과의 합작사업 및 직간접 무역의 확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1991~1992년間に 있었던 일련의 사건 전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들 사건의 전개에 있어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대화가 공식 비공식 수준에서 확대되었는데 공식 대화는 북경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보다 자유롭게 양측의 관리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회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공식 대화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제3국에서 열린 훨씬 다양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격상시킬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1991년 가을 부시 미국대통령이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지상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곧이어 남한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에도 이 선언이 적용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주요 신호를 보낸 셈이 되었다.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도 남한에는 더이상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1년 핵무기에 관한 한미간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해 마지막 석달간에 발생한 극적인 사건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정은 역시 25조로 구성된 합의서였다. 양측은 군사안보,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합의서에 규정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길 수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곧이어 12월 31일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1992년 1월 7일 북한 외교부는 북한은 핵안전협정에 서명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비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상호 합의한 시간에 국제핵사찰을 수용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바로 이날 팀스피리트훈련이 앞서 미국-남북한간 합의한 바대로 중지될 것임이 발표되었다.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22일 미-북한간 고

위급회담이 뉴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북한간 관계 진전은 여러가지 현안, 그 중에서도 특히 핵사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미-북한간 관계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1년후 모든 부문에서 불확실성과 비관주의가 팽배하는 등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다. 6차례에 걸친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 이후 북한은 일부 IAEA 조사관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주를 받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사찰중지를 명령하였다. 더욱이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자신이 지난 1985년 서명한 바 있는 국제핵확산 금지협정(NPT)에서 탈퇴할 의사를 공표하였다. 남북한간의 대화는 실질적으로 거의 중단되었고 간접 교역도 감소하였다. 한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1992년 2억 천3백만 달러에 달하던 교역이 1993년 상반기에 20% 이상 감소하였다. 일본과의 협상도 1992년 11월 이래 중단되었다. 반면에 미국과 남한은 1993년 초까지 북한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결국 3월에 이 군사훈련은 실시되었다.

왜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되었는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 세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자기 껍데 넘어간 결과가 아니겠는가? 즉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경우 IAEA의 사찰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라크의 경험에 견주어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내용이 밝혀지리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같다고 일부 관측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핵사용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IAEA는 훨씬 정교한 실험실을 사용하였다(Lawrence Livermore and Los Altos). 덧붙

여, 미국의 첩보위성들은 북한이 “순수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시설에 핵폐기물질을 상당량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IAEA 관리들은 북한이 NPT로부터 탈퇴할 것을 결정한다고 발표하기 수 주 전에 북한측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과 화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일부 석연치 못한 점과 파행적인 면을 드러낸채 북한은 IAEA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정밀한 사찰을 금지시킬수 밖에 없었다. 반복적으로 북한 관리들은 그들이 결코 “순수한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사에도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이 과연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개발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핵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과연 이를 포기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목표로 남아있는지 하는 질문이다. 일부 관측자들은 북한이 80년대 초반에 남한과의 재래식 무기개발 경쟁 및 그 비용을 고려하고 위상강화를 목적으로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믿고 있다. 기술적 어려움과 러시아 및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점증하는 반대 등이 차후에 이에 제동을 걸었을 것이다. 북한이 1개, 2개 또는 3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만큼의 플루토늄을 생산해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밖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당국은 그들은 그같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질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북한이 보존하길 원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지하 시설을 갖추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

는 것은 아닌가? 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북한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그들이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즉 일부 관측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미 노후화된 그들의 시설 및 장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은 아닌가? 이상과 같은 불확실한 점들은 현재로서는 밝혀낼 수가 없다.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핵 이슈를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특히 미국과의 바게인 레버리지로서 핵문제를 사용하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과 IAEA 안전절차 향상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핵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당사자 회담을 통해 미국에 접근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전술이 어디 있겠는가?

대내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NPT 탈퇴 위기는 아버지의 권력 승계자로서의 김정일의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김정일은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큰 위협에 직면하여 전체적인 단합과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호소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권력 승계자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에서 논한 요인(문제)들이 얼마나 정당인가 혹은 상대적 비중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상 세가지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적절한 시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 물론 1993년 초 북한의 정책은 남한과 미국을 심각한 곤경에 빠뜨렸다. UN의 제재 동의를 얻어내는 즉각적인 노력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이 북한을 후퇴하게 만들까? 또는 북한의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협상 문호를 계속 열어 놓아야 하는가? 남한과 미국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핵무기 이상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인들에 의해 제공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 증거에 의하면 북한은 생물학 무기를 실험했다고 한다. 이 무기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의 NPT에 대한 입장이 의문을 더해가고 있을 때인 5월 29~30일 사정거리 300~600 마일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1호에 대한 실험이 동해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때에 바로 이 미사일의 對이란 수출이 오일과 필수품을 교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상의 일련의 행태는 지금 말한 무기 프로그램이 안전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들어서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북한이 1991년 12월의 합의서 약속대로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화해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남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평행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은 북한의 NPT 복귀와 IAEA 안전사찰의 전면적인 수용을 받아내기 위해 뉴욕에서 중간급(medium-level) 관리의 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다. 첫 회담은 6월 2~11일 뉴욕에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 정치 군사문제 담당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이 이끄는 대표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사용과 위협으로부터의 보장, 전반적인 안전수칙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보장, 자주권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및 평화통일 지지,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NPT 탈퇴유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6월 11일의 공동성명은 수개월 전에 추구된 입장과 전술을 반영한 것이었다. 무력사용,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지지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북한 주권의 존재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다. 그러나 북경에서 접촉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것도 뉴욕에서 만나려 했던 미국의 노력은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시달리는 북한이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중요한 이슈들에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미국의 화해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북한으로서는 NPT 복귀의 체면치레 수단을 확보하였으며 과거 IAEA의 미국과의 연관성을 반대하는 것을 지칭하는 '편파적이지 않은(impartial)'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을 수 있었다. 북한은 표면적이지는 않지만 IAEA 사찰수용을 함축하는데 동의함으로써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한 셈이었다. 공동성명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회담의 재개를 시사함으로써(표현하지는 않았지만) 1991년 12월 남북합의서에 의해 양측이 지지한 약속을 포함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그토록 원했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6월 11일의 공동성명을 통해 평양측이 미-북한간 회담의 중지와 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을 막기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양보함으로써 최소주의(minimalism)을 추구하는 북한의 전술을 엿보도록 해주었다.

한편 이 성명은 미국에게 많은 딜레마를 주었다. 첫째, 북한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활동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똑같은 테마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가? 둘째, 북한의 목표 중의 하나가 미국과 남한을 이간시키는 것이라면 남한과 어떤 정책적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 동안 외부의 두 기구가 이 문제에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되어져 있었다. 5월 11일 이전 IAEA 이사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안보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NPT 안에 머무르고 국제사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며서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기권했고 제재를 반대하는 한편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원했다. 중국 관리들과 미국 및 한국 관리들 사이에 사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워싱턴과 서울에 낙관적인 기대를 낳게 하였다. 아무튼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 노력없이 UN제재를 논의했으면 중국의 반대(veto)라는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또한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토의를 한 다음 미국은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2단계 대화를 가졌다. 7월 19일의 성명에 의하면, 존중하는 측면의 전략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와 억제 구조가 수정되어 전자가 훨씬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6월 성명에 포

합된 무력의 사용에 관한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외에도, 미국은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결의안이 성취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충분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IAEA 안전수칙의 적용’은 강력한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의 수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했고 안전수칙과 다른 이슈들에 대하여 IAEA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이슈에 대한 남북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2개월 안에 다시 만나 경수로와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를 포함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항을 토의하고 ‘북한과 미국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미국측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은 7월 12일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17구의 유해를 판문점에서 미군에게 직접 인도해 주었는데, 이것은 지난 1992년 5월 12일 15구의 유해를 非軍事 관리에게 인도한 전례와 다른 방법을 사용한 점이 주목을 끈다.

제네바 회담 직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7월 10~11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하였는데 국회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IAEA 사찰에의) 보증할 수 있는 순종과 남북한간의 비핵화 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미국이 남북대화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서울의 이익이 경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8월에는 IAEA 사찰이나 남북대화 어느 것도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한국 및 일본 관리들은 워싱턴에서 만나 공조체제를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3단계 미-북한 회담은 9월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평양에 보내진 셈이었다.

수주일 후 북한의 최소주의 라인(minimalist line)이 완전 가동되었다. 몇주 동안의 협상 후에 세명의 IAEA 사찰관이 모니터 기재의 체크를 위해 9월 1일 영변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었으나, 토의는 소위 '군사시설'의 사찰 이슈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더욱이 공정성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찰팀은 차후 IAEA 이사회 보고에서 만족할만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

남북대화의 재개에 관해서는 더더욱 진전이 없었다. 평양측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울측이 모든 '핵전쟁 연습' 즉 팀 스피리트 훈련과 8월 17~31일 사이에 있었던 을지 포커스 렌즈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의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즉 미국 및 일본과의 협조를 추구하는 정책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9월 10일의 회담은 개최되지 못했으며, 북한은 남한에게 수용하기 힘든 이상 두가지의 요구에 대해 9월 20일을 시한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9월에 서울을 방문한 갈루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남북대화와 관련한 진전이 이 시점에서 3차 미.북회담을 허락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는 데 한국과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6월과 7월의 강한 희망은 9월 중순에 와서 줄어들게 되었으며, 적어도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의 전조가 될지도 모를 동의속으로 북한을 끌어내려는 노력은 조기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9월 하순에 의견차이는 심화되었다. 9월 27일에 열린 국제원자력기구의 5일간 회의에는 114개의 회원국이 참가했으며, 여기에서 북한의 입장을 의제의 하나로 그들 논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측 대표인 이승현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악의에 찬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일정에서 제외된 총회의 토론을 요구했다. 동시에 북한의 원자력에너지 장관인 채학근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인 한스 블릭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찰을 토의하기 위해 10월 5일-8일 사이에 비엔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양자토론을 가지겠다는 동의를 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철회했다. 북한의 강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이 문제를 삽입하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다.

한편, 1993년 초여름 이래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미국인과 미국 단체들을 접촉하는 것을 격감시켰다. 이미 초청을 받았거나 방문이 허락된 몇몇 유명한 미국인들은 그들의 여행을 연기하도록 요청받았다. 군축평화연구소(IDP)를 통하여 북한은 미국센타가 후원하는 회의에의 참석을 취소했다. 아마도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IDP가 대표를 보낸 미국에서 개최된 한 회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종교적인 인물을 중심으로하는 통일전선작전이었다. 북한의 대미활동에 동정적인 사람들에 국한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은 초기의 입장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 같다.

비공식적인 접촉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의 대변인은 단지 하나의 통로를 통해 토의를 진행하자는 것을 뉴욕과 제네바회담에서 약속이 되었다고 시사했으나, 워싱턴이 비공식 토론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워싱

톤은 어떤 의미에서 비공식적 또는 준공식적인 토론이 진척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노선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북한이 다양하고 미묘한 주제에 대해서 대표단이 발언하도록 요청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한내에 있는 저명한 미국인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인가? 또는 북한당국이 그것이 곧 파란만장한 길을 따를 것이라고 예견하고,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견고한 노선을 시위하기를 원하는가?

비록 확실한 증거가 결여되어 있지만, 북한내부에 정치전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노선을 고집하는 진영과 가능한 빨리 경제개혁으로 나아가고 따라서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진영간의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한편, 정부대 정부의 대화가 교착되어 있을 때 조차도 남한과 북한의 “진보적인 학생들”간의 접촉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활동, 제 4차 범민족대회 등에 힘입어 남한에 대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은 계속해서 잘되어 나가고 있다.

이제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미 북한관계의 문제들로 되돌아가 보자. 지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정책의 두가지 원칙은 거의 변할것 같지 않다. 첫째,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체제를 추구할 것이며 한국의 정책들에 모든 지원을 보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이간하는 어떠한 노력도 양측에 의해 단호히 대처(반대)되어질 것이다. 지속적인 의논과 정책 협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강화된 적은 없다. 오직

이러한 방법만이 북한의 “분리와 정복”전술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깨닫게 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중국의 협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요구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중국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핵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반발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미 미국과의 공조로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요격체제의 개발이 실질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어떤 일본인은 심지어 미래의 불확실성하에서 NPT의 무한정한 연장에 동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최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베이징은 완충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북한과 관련하여 “우선”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인권, 전략무기의 이전 및 거래와 같은 특별한 문제들 때문에 최근 악화되어 왔다. 올림픽 결정은 베이징의 지도자들을 격분시켰으며, 미국은 크게 비난받았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국익에 명백하게 봉사하는 그런 도움이 없이는 미국의 정책을 도울 분위기에 있지 않다.

미국은 핵안전장치(조항)을 강화할 필요를 강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재량권을 IAEA에 주기위한 방안을 고려하면서 IAEA를 지지하는 것을 거의 확실히 계속할 것이다. 안전장치조약을 약화시키는 것(사람)에 공범이 있을 기회는 거의 없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워싱턴과 서울의 양측에서는 두개의 분파가 나타나고 있다. 한쪽은 보다 강도높은 해결책을 실행할 때, 이름하여 경제 제재를 가할 때가 왔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가능하다

면 다른국가로 부터의 간접무역과 금융교환의 삭감을 강화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일본으로부터의 금융의 흐름은 특히 중요하다. 在日 한국인으로부터의 송금과 친척에 대한 선물, 그리고 투자의 형태로 한해 약 5억불에 달하는 금융의 흐름,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의 70%는 일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을 포함하는 두만강 삼각주계획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미래의 지원에 의한 활동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의한 반대를 또한 포함한다.

극소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TS는 관련 군사훈련과 함께 유지되어 지고 인공위성 감시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의 견해는 보다 온건함을 취하지만, 여전히 경계의 방향이다. 워싱턴과 서울 양측에 의해, 중요한 문제에 있어 북한에 대해 보다 화해(타협)자의 입장을 향한 정책의 변화(이동)를 위한 문은 열려진채로 남아있다. 동시에, 더 이상의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되며 진전은 주의깊게 감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IAEA 사찰과 남북대화와 관련한 현추세가 지속된다면, 평양의 가능한 입장변화에 대한 문을 닫지 않은채라도 제재는 머지않은 장래에 가해질 것이다. 종합하면, 필요하다면 협상과 제재가 나란히 활용되는 두 궤도 과정 (a two-track course)이 추구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제재가 UN을 경유하여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면, 이것은 적어도 한국, 일본, 미국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과정(진행)을 지원하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제재의 효율성은 의문시 될 수 있으며 그리고 확실히 현재 북한의 생명보급의 주된 공급원인 중국의 태도는 결정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수입석유의 40%는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장래의 협상에 대한 문이 열려있다면 중국의 협조에 대한 희망이 있다.

군사적인 공격은 가능한 정치적, 군사적 반발의 양측면에서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군사적인 보복(서울은 국경에서 25마일내에 위치하고 있다)을 자극하든 하지않든 간에, 이것은 한국내에서의 여론까지도 포함하여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여론을 가장 확실하게 분렬시키게 할 것이다.

반면, 만약 북한내부에도 경제개혁으로 나아갈려는,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남한, 일본 미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 최소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소에 유인을 제공하면서, 분명한 대안들을 제공, 수행하면서 그러한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

아무도 북한의 장래를 점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밖에서 살고 있는 한 사회이다. 생활은 엄격하고, 보통시민을 위한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 승배는 정치체제를 가로 막고 있으며, 그리고 제도는 사람, 특히 최고 엘리트의 손에 돌아나는 장난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계는 임박해 있으며, 김정일이든 아니든, 조만간 보다 젊고, 보다 잘 교육 받고, 더욱 기술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이 전면에서 군인과 시민의 지도적 입장에 서게될 것이다. 현재의 금지(억제)가 무엇이

든지 간에, 북한내에서도 어떤 변화의 행위자(발동자)가 있다: 동구, 러시아, 중국에 유학한 수천의 학생들; 한때 일본에 살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10만명의 북송교포; 숫자는 작지만 서구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일단의 군인과 외교관들. 미래는 이들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조만간 그들은 더욱 힘차게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에도 위험은 있으며, 그리고 현재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위험한 시절인 것 같다. 그렇지만, 미국과 남한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최대의 지역적 세계적인 지지를 요청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고의적 또는 다른 형태로 오는 신호에 보조를 맞추어 지속적으로 代價와 誘因을 구사하면서 정책을 추구한다면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一考

Hisahiko Okazaki

前 泰國駐在 日本大使

서 문:

불행하게도 현시점은 북한사회의 개방 가능성과 미래 남북통일에 대해 논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북한 핵무장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관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관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I. 분 석

1)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난 20년동안의 일련의 사건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무력적 한반도 통일 의도는 1975년 싸이공이 함락되기 4일전 김일성의 중국방문에서 명백히 표명되었다. 당시는 북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산권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유래없는 낙관적 견해를 갖게 한 때이다. 사실상 1960년과 1970년대의 공산권의 군비강화는 점차적으로 1975년에서 1981년 또는 1982년에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1980년 초반은

NATO, 북서태평양과 한반도 전선에서 공산권의 군역량이 상대적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1979년에서 1985년에 걸쳐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공산진영이 군사적 우세를 점했지만 1980년대에는 점차 약화되었다. 남북한간의 균형상 북한이 양적인 우세를 유지했지만 남한이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장이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의 급속한 군비강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중 하나로 간주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북한이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했느냐는 것이다. 당시 러시아로부터 4개의 핵시설 수입건으로 인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능력을 과소평가했을 것이며 필요시 사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사찰수용, 문제가 되는 두개의 시설에 대한 사찰거부 그리고 또다시 지난 8월 새로운 사찰에 대한 방해공작 등 일련의 북한의 행위로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기술적 세부지식이나 정보분석 등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북한이 핵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충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정이다.

2)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제국주의적 과잉팽창을 축소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부터 북한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악화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올림픽 개최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1990년 9월의 한·소 수교의 결과 북한은 유엔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은 1991년 8월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1992년 8월 남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게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한은 “교차승인”이라는 제안을 해왔었다. 이 제안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인정하는 조건하에 소련과 중국이 남한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남한이 목적을 달성한 반면 북한은 고립되었다. 이것은 분명 남한에게는 외교적 승리였던 반면 북한에게는 패배였다.

3) 북한의 공식 정책은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로 구성된 연방제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기본정책은 아직 북한 정권의 이익에 부합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기존의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화해의 결과물로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인정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한의 국가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남한은 급속하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독일통일은 두개의 체제는 급속하게 통합되어서는 안되며 점진적인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북한 모두에게 주었다. 이러한 정책상의 일치는 남북한간의 대화와 그에 따른 여러 합의 도출로 이끌었다.

4) 한편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핵무기확산금지에는 탈냉전시대에 있어 미국의 주요 정책목표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과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적 핵확산금지 레짐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별로 없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한정된 공습은 이라크의 핵개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한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공습이 반복될 수 없다면 최소한 지속적 공습위협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습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전쟁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응은 량군 사건식의 테러행위 또는 서울에 대한 직접 폭격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전면전은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정치적 상황은 그러한 과격한 조치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제재 역시 힘들다. 중국의 식품과 석유공급의 일시적 중단은 북한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연적으로 붕괴할 경우 중국은 침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옛 친구인 북한을 스스로 파멸시키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는 중국의 협조없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효과적 경제제재의 결과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제재조치하에 북한은 전시비축식량과 석유를 소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41년 일본이 자체

내의 재고가 바닥나자 전쟁을 일으킨 것과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효과적인 균형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긴시간에 걸친 참을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방법외의 대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 최대한의 양보를 하여도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아마도 북한은 양자를 다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핵개발은 외부세계와의 협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점은 그 어떤 국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반면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외부세계의 일반적 합의사항이다. 따라서 양보를 하더라도 그 양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오랜기간 동안 협상에 임하는 동안 북한은 서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II. 정책적 합의

1) 남북한의 관계진전은 핵문제가 해결되기전까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

2) 협상진행중에 외부세계는 새로운 현상유지를 인정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할 경우 남북한간 대화는 다시 안전으로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의 보다 많은 접촉으로 북한의 폐쇄사회를 개방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 그러나 외부세계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도덕적 압력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노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핵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3) 위와 같은 결론은 절망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면, 또한 외부세계는 군사 경제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을 계속 고립시킬 수 있는 도덕적 제재는 마지막 남은 대안이다. 도덕적 제재가 일관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행해지기만 한다면 결코 시간적 낭비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료시절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물론 제3국은 북한의 개방이나 미래통일문제에 관여해서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다. 1988년 즉 베를린 장벽이 부너지기 전 해까지 동서독 관계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서구와 러시아 전략가들은 동서독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인은 항상 두독일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는 날에는 통합을 방지하거나 통합에 대한 그 어떤 전제조건을 부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독일문제는 독일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독이 마르크를 단일화한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현재의 분석이다. 그러나 화폐 단일화는 정치적 역동성의 결과였다. 제3자는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한 기본정책은 남한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남한의 정책을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는 한국민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 문제는 관여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교훈에 근거하여 북한의 점진적 개방은 준비 없는 급속한 통합보다는 낫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급작스런 통합으로 유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중간 단계인 연방제 형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것과 폐쇄된 자립적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논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양보보다는 전쟁을 도발할 소지가 농후하다.

앞서 지적된 정책결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핵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참을성 있는 協商政策만이 유일한 정책적 대안이다.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현재의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이 자해를 야기시켰고 결국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반성케 할 수 있

겠다.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은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개발하는데는 여러해가 걸리기 때문에 그 연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핵무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정치체제는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도 없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일본 밖의 몇몇 평론가들에 의한 것이지 일본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은 전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

제 1 회의: 미국, 일본의 대북한 정책

토 론

사회자: 한배호 (고려대 교수)

토론자: 이기택 (연세대 교수)

박경서 (중앙대 교수)

육태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배호: 지금부터 오전 제1회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분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을 듣고 플로어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이기택 연세대교수, 박경서 중앙대교수, 민족통일연구원의 육태환박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기택교수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간략하게 코멘트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50년 중반부터 계획해 온 것인데 이러한 국가전략정책을 전환하려면 거의 모든 체제적인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책의 수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행정책을 수정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써지칼 스트라이크든 다른 형태로든 제재하려는 위험한 상황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스칼라피노 교수님한테 듣고 싶었고 교수님이 보시는 현단계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듣

고자 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을 보는데는 Blind Map 즉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러한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북한도 역시 사람사는 사회이며 김일성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오래 지속된 체제이기 때문에 반듯이 Blind Map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권력체제는 확실히 사상은 반미, 반제라는 사상을 갖고 50년동안 존속해 왔습니다. 남한을 일차적인 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미국을 일차적인 적으로 보아서 북한의 권력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레이몽 아롱이 국제정치의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대로 empire system으로 이 세계가 나아갈 것으로 볼 때에, 소련 제국이 몰락한 지금에 와서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한다고 볼때에 과연 북한의 반미로 조직된 체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뚜렷하게 예견됩니다. 이것은 반듯이 blind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체제로 볼때에 북한의 경제체제는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공업적인 잔재를 기초로해서 홍남댐, 홍남질소비료공장 또는 강설 제철 등을 회복시켜서 그 위에 중공업적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날 시장경제라 하는 새로운 원리가 동북아시아에 파급되어가는 상황하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생산물은 노동 1호와 이란, 이라크 전쟁때에 수출한 포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새로운 물건을 내놓을 수 없게 된 것도 중공업우선주의라 하는 군사체제의 경제체제를 한국전쟁직후부터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 벽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번째로는 군사체제에 관한 것인데 휴전선 군사역량의 관점에서 볼때 핵문제를 첨가하면 오늘날 한반도는 어느시기 보다 가장

전쟁하기 좋게 되어 있다고 보아 집니다. 권력체제나 경제, 사회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두분의 발표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문제는 북한의 정치변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변동이 어떤 성격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점은 한국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정치변동은 제 견해로는 김일성사망시 당체제는 족벌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과 함께 쉽게 해산되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여러 각도로 구축해 놓은 군부는 우리가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고 또 체제유지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군부가 북한의 체제를 인계받아서 당분간 유지해 나아 가리아 보아집니다. 6·25 직후부터 모스크바에 유학한 간부들만도 2만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다른 서구국가와 같은 서구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배운 북한의 군부엘리트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북한에 정치변동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군부는 혼란을 수습할 것입니다. 다만 군부가 어떤 성격될 것인가하는 것은 아이로니컬 하게 박정희의 5·16혁명이 참고할 수 있는 data라고 보아집니다. 박대통령도 민족주의자로 탈냉전으로 남북한이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60년에 군사혁명을 일으킬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특사를 해주에 들여보내서 김일성과 타협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습격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북한과는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대통령은 민족 중흥이라든가 부국강병이라든가 또는 근대화라로 우리의 국가방향을 수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의 일관된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능력이 있는 지식,

권력, 능력, 조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체제를 일단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조 500년의 역사자료를 본다면 족벌로 구성된 북한의 노동당체제는 군에 의해서 깨끗이 숙청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것같은 전통이기 때문에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스칼라피노교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미 동맹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동맹관계는 앞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변화는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냉전체제에 기초했던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탈냉전후 새로운 정치원칙에 의해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한미안보조약은 미·일안보 조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미일안보조약 제 5조는 일본 열도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6조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일본열도주변에서 군사분쟁이 야기되었을 때에 미일간에 어떠한 군사협력을 하는가 하는 것이 한반도 조항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협력에 대한 가상적국인 소련이 없어진 안보환경의 변화가 6조에 관련한 미일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협력과 태도에 성격변화를 끌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동맹관계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본문에 있는 문제입니다만 북한에 존재한다는 매파와 비둘기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1970년 초에 master플랜을 짤 때에도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비둘기파라든가 매파라든가 하는 것은 서구학문의 상

상이지 북한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증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한반도문제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냉전시에는 반공이다 공산주의다 하는 정치적 대립으로 한반도 분쟁이 정치적 성격으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불가피하게 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쓴 new world order라는 관점에서 볼때에 북한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 문제중의 중요한 또하나의 변화는 평화공존이라는 것이 70년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을 유지하는 부시대통령이 91년 말에 전술핵을 빼는 순간부터 한반도의 군사환경은 재래식 군사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deterrence에서 defense로 변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환경으로 변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기초로한 평화공존 개념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미국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까자키 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역시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도 결론에는 일본이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집중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화정책도 아니고 군사적 제재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제재는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핵개발을 기정 사실화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본이 핵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핵개발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밖의 사람

들만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 열도가 노동1호 또는 노동 2호의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깊이 관련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운반수단과 관련된 핵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치사와 대정사는 확실히 일본의 학자와 상식적인 일본의 국민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과 관련된 소화사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황과 관계되는데 천황을 건드리면 극우세력의 보복위협으로 인해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이러한 것은 핵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일본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자위대를 군대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과거 여당도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위대가 군대라는 것은 외부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것입니다. 헌법9조에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째가는 군사력을 키어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북한의 핵문제로 자국을 핵보육국으로 만들려한다는 의도로도 이웃나라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분께 물겠습니다. 북한이 양보를 안하고 국제사회가 surgical strike를 해야할때에 우리 한국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 몇가지 전체를 제시할까 합니

다.

북한핵 문제는 남북한간이든 미북한간이든 일북한간이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칼라피노교수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으로 유인·억지정책 등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미의 대북 정책이 비효율적인 측면은 없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분명한 당근도 채찍도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시간만 벌고 이익을 챙겼으며, 일본은 핵개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방어문제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단호한 정책을 추진하여 결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핵문제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이며 저지할 것인가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탈냉전후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대를 중심과제로 하고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북국교 정상화 회담을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

첫째, 핵실험이후의 중국을 북한제제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며, 참여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둘째, 외교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바뀐다고 할때 북한의 핵개발과 노동1호의 전진 배치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이는것이 아닐까?

셋째, 대북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전략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국론을 통일해야 하고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가져야 할것입니다. 미·북국교정상화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

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태환 박사께서 코멘트와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환: 감사합니다. 두분 발표자의 논문발표와 두선생님의 토론을 잘들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제적 석학이신 스칼라피노 교수님과 주한일본 대사관 공사를 오랜기간 동안 역임한 오까자키 대사님의 논문을 읽고 배운바가 많습니다. 두 토론자께서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북한은 더이상 IAEA의 핵사찰을 받을 수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칼라피노 교수께 묻고 싶은 것은 제3차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인 IAEA사찰과 남북회담진전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혹은 미국이 3차회담을 열기 위하여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평양이 IAEA사찰의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하여 제3의 기구나 기관에 의한 핵사찰, 예를 들면 유엔에 의한 핵사찰이라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정권 유지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논문에서 왜 북한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쓰셨는데 몇몇 학자들은 교수님이 논문에서 언급하신 이유에 더하여 미국이 북한과의 핵문제해결후 인권, 화학무기, 노동 1, 2호 미사일 문제 등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국이 참여정책의 추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평양에 무역대표부를 설립하거나 대사관을 설립하는 것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할 경우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한에 체류중인 약 10만명의 재일교포와 해외교육을 받은 북한엘리트 그리고 외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부와 외교관들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과연 이들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만큼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오까자끼 대사님께서서는 만일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이 군수물자의 고갈을 우려 확전을 결정한 것 같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사님과 견해를 다소 달리합니다. 1941년 미국이 대일 경제제재를 가했을때 일본이 확전을 결정한 것은 인도지나반도까지 진출하여 석유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 일본과는 달리 현재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같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지원해줄 우방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경제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전쟁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의 경제는 철저한 자립경제이기 때문에 UN이 경제제재를 가한다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UN 경제제재시에도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유와 원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경제제재는 김일성정권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북한 주민은 많은 희생을 치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김일성은 북한주민이 큰 고통을 겪게 되어도 개의치 않을 것이며 다만 그의 정권유지에만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까자끼 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사님께서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북한과 그 어떤 외교적 또는 상업적 거래를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협을 포함한 좀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셨는데, 핵문제와 관련 국제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남한이 국제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대북유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대사님께서서는 도덕적 압력만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최후의 수단이라 하셨는데, 도덕적 제재의 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유지하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스칼라피노 교수님부터 제기된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스칼라피노 교수: 감사합니다. 많은 유익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또한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저는 미국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이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정권의 설립시부터 미국을 그들의 적이라고 상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의 주목적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일본 또는 남한과의 대화재개보다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전쟁도발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계신 몇몇 참석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알고 있으며 남한의 군사력 또한 막강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을 완전 파멸로 이끌 전쟁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정치에서는 비합리적 행위도 종종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과 1950년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기택교수님이 제기한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민중폭동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지도부에서 심각한 논의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두가지 정책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개혁정책으로서 개방을 통한 투자유치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사회파급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으로 사실상 현격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북한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군부, 전문관료 동맹이 형성되어 중국식 경제개방

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취해오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로서 비록 레닌주의적 정권과 같이 엄격한 규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경제와 사회부문에서는 시장경제와 다원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북한이 결국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체제가 그 이전에 붕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제기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위험부담과 모든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과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즉 이전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벗어나 파드너 관계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 누가 매파이며 누가 비둘기파인지를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북한내부에서는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북한이 2개내지 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미사일분야에서는 상당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기타 재래식무기 분야에서는 낙후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북한으로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사찰은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 공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군사제재는 반대합니다. 경제제재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곧바로 취해야 한

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IAEA는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변시설에 설치한 카메라의 필름이나 배터리가 바닥이 날 경우 사찰은 일단 중지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IAEA는 이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에 대해 취해질 수 있는 여러 대응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비록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으나 경제제재를 취한다고 해서 모든 대화의 채널을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에 대한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을 계속원할 것이며, 경제적 지원또한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주어진 사실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현명치 못합니다. 비핵확산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 전면으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4국은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며 남북한의 관계개선없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동안 최소한 주변 4국의 관계 진전에 의해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영삼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던 국민적합

의를 전제로 한 대안을 북한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의 정책 또한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지도부 구성원은 현재 실질적 권한이 없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이들 소수의 개혁파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의 특정 행위와 정책에 대해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서울 그리고 다른 국가의 성향은 북한을 봉쇄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유인과 역제를 겸비한 유연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공동보조를 위해 할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오까자끼 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까자끼: 저는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경제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시킬 가능성

을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문제발생시 한국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본은 그 정책을 지지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전적으로 한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경제제재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완상 부총리님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정책은 참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라 하셨는데 이 정책은 효과를 볼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북한의 핵무장은 주어진 사실로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상황분석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택 교수님이 제기한 일본의 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가의 기본 입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정해야 하며 외교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감정적 문제와 개인적인 생각은 저의 논의에 게재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갖기위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 동경을 폭격할 경우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와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보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 1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빈 면

第2會議

中國, 러시아의 對北韓政策

빈 면

한반도에서의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李 琮

中國社會科學院

世界政治·經濟研究所 所長

한국은 장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위대한 민족이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민족적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기로 충만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산물로서 한반도는 인위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오랜동안 서로가 갈라선 채 대치하고 있어야하는 불행을 초래하였다. 남과 북은 분단상황을 종결하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재결합은 한국 민족의 기본적인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계, 학계 등 많은 분야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의 지도자들이 수 많은 제안을 하였고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통일을 위한 기본 조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면 객관적인 몇가지의 기본조건이 충족

되어야하며 이것은 한국의 점진적인 통일의 길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에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단일민족이다. 한국 민족은 역사적으로도 통일된 국가이었으며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인은 강한 민족의식, 민족 특성과 민족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같은 민족, 같은 문화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강한 민족적 구심력을 가지고 있다.

(2)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의 당국자들은 서로 고립된 채 대결상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상이한 발전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렇지만 양측은 통일을 위한 강한 집념을 보여 왔으며 결코 이를 누그러 뜨리지 않았다.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기본 이익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남한과 북한의 그 어디에서도 통일을 반대한다거나 분단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3)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간에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가공산업이 잘 발달한 반면,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기초산업(excavating industry)이 잘 발달되었다.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북한은 서로의 이점을 살려서 전국토에 걸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은 통일을 간절히 원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몇가지 방

해요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기이다.

원천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동서 진영간의 냉전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산물이다. 냉전기간 동안에는 통일이 불가능하였다. 이제 냉전은 끝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일찌기 없었던 호기를 맞이하였다.

4대강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최근 몇년 동안에 동서 진영간의 관계완화와 탈냉전에 힘입어 이 4강들은 동북아시아 전략과 남북한 외교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통일을 위해서 호의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1) 중국은 모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과거에 중국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2년 8월 중국은 남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구소련은 북한에 무기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군사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은 군사지원을 감축하다가 마침내 중단하고 말았다. 1990년 9월 30일 구소련은 남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추구해온 이와같은 아시아-태평양 정책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3)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은 북한과 남한 간의 정치적 반발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한반도 통일에 최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을 수정하고 북한과의 어떠한 접촉이나 대화,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던 경직된 정책을 바꾸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16일에 미국은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였고, “협조적인 정신(cooperative spirit)”에 따라 군사훈련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남한에서 미군기지를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북한에 통보하였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감소시키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의 대화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4) 일본은 과거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북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여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1991년 1월에 일본과 북한은 외교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요약하면, 4대강국의 외교적인 노력과 정책조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완화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호의적인 국제환경이 마련되었다.

3. 북한과 남한간의 관계개선

국제상황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양측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남한과 북한은 상호간에 “정치실체”임을 인정한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동일한 정치실체로 인정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체제고수를 고집하는 북한정부와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 남한은 태도를 바꿔서 통일의 어느 단

계까지는 “1국가 2체제”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정부의 합법성을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도 입장 변화를 보여 남한정부에 대한 어느정도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 대화할 뜻을 비치고 있다.

(2)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1973년 초에 남한은 유엔 동시가입안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강한 반발을 보였으나, 후에 북한은 변화를 보였다. 1991년 5월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 되기위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같은해 가을에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 이것은 분단을 영구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간의 정치실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남한과 북한간의 군사대결이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양측이 군사적인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어야하며 “협조적 정신”에 따라 수행되는 전쟁 연습의 연기와 남북한의 무장병력감축을 요구해 왔다. 1991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양측은 무력에 의지하지 말고 무장해제계획을 실행에 옮기자고 제안하였다. 더우기 남한은 예비군을 감원하고, 핵무기의 생산, 비축, 보유, 배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북한은 미군이 핵무기를 철수하는 즉시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일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대화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한의 성의있는 노력에 힘입어 1989년 이후에는 양측의 대화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1990년 말까지 제3차 남북한 총리 회담이 열렸으며 많은 사안에서 의견의 접근을 볼 수 있었다. 1991년 10

월과 12월에는 제4차, 제5차 남북총리 회담이 열렸다.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한 화해, 불가침, 협력과 교환에 관한 협정”이 타결되었다. 양측이 지난 날에는 양보할 수 없었던 몇가지 문제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평양과 서울에 정부대표부를 설치하고,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방면에 4개의 특별위원회를 3개월 내에 설치하기로 동의하였다. 1992년 북한부총리인 김달현은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남한의 최각규 부총리는 평양을 방문하였다.

(5) 남한과 북한간에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8년동안에 처음으로 1991년 5월에 직접교역이 이루어졌으며, 그해 무역량은 2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남한정부는 북한의 경제특구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제상황의 개선에 따른 산물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협조적인 노력의 대가이다. 이러한 확고한 기초 위에 남북한은 미래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통일과정에서 필요한 原則

조국을 통일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1972년 북한의 부총리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하였고,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평양을 방문하였다. 같

은해 7월 4일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적 통일과 민주화합”의 3원칙에 입각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990년 말에 양측의 총리는 재차 회담을 가지고 위의 공동발표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외에 양측의 지도자들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원칙을 발표하였다. 예를들면 1988년 11월에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정부원은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4개 강령과 긴장완화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blanket plan)을 발표하였다. 올해 7월 6일에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은 제6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3기조를 주창하였다. 나의 견해로는 이러한 원칙들이 표현만 다를 뿐 기본정신은 같으며 양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

(1) 평화

폭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제2차 대전이후에 힘으로 통일을 달성한 국가는 베트남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외국의 군대들이 참전하여 베트남인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에는 결코 그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자주

한국의 통일은 남북한의 정부와 국민에 관한 문제이므로 자신들의 의지로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외국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양측의 공통적인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며 어떠

한 구실로도 한반도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3) 평등

남한과 북한은 동등한 입장이어야만 한다. 남북한 어느 측도 다른 측에 힘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자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2월에 대통령이 되자 김일성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남북한 총리급회담 개최에 동의하였다. 남한의 총리와 만난 김일성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먹으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먹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 이후에 남한의 일부인사들이 독일통일의 모델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남한이 강점을 살려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1991 1월에 노태우 대통령은 남한발전학회(the Academy of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에 독일모델에 바탕을 둔 한국통일 계획을 작성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발상은 북한의 경계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며 통일에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니다. 통일후 독일의 실상은 이 모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였으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독일은 통일되었으나 동독국민들은 2등 시민이라고 느끼고 있고 서독국민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욕구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 사회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배워야할 교훈이다. 최근들어 남한에서는 독일모델이 적절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4) 민족적 통합 (national unity)

민족적 통합은 한반도의 남북한을 통일함으로써 가시화 될 수

있다. 민족합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 측도 체제자체를 힘으로 통일하고자해서는 안된다. 통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만 하며 최적의 정치·경제체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남북의 공동번영을 구가할 수 있고, 공동으로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공동의 민족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5. 통일을 위한 계획과 단계

북한과 남한은 통일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1988년 말에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모델인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창하였다.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이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동맹 모델인 “한민족 공동체” 계획을 공표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올해 7월 8일의 제6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 협조”의 3단계를 거쳐서 1민족, 1국가로의 이행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제기한 계획과 단계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양측은 2체제와 2정부가 공존하는 실체를 인정하며 이러한 실체인정을 바탕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조국의 점진적인 통일을 이룩하고자 한다. 상호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통일을 계획하고 단계를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1) 1국가 혹은 2국가

과거에는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정치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국가로만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과 남한이 유엔에 가입함과 동시에 2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므로 남북한에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2) 연방제 혹은 주권국가의 동맹 모델

2 국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양측은 통일의 과정에서 상호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류를 필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으며 통일은 가능하면 빨리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양측은 반세기동안 고립되고 반목해 왔으므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상호교류와 왕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방해요인과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한다. 그러므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달성되리라는 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독일의 통일이 빨리 이룩된 것처럼 보인다. 구소련이 對동유럽정책을 전환시킴으로써 동유럽국가들이 차례대로 극적인 변화를 겪으며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통일은 성급하게 이루어져 심각한 후휴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통일은 미성숙된 여건 하에서 일어난 무리한 시도이었음이 자명하다. 옛 성현의 말씀대로 성급함은 낭비를 초래한다.

(4) 남북간에 군사대결을 완화하거나 經濟協力 혹은 무역관계개선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미군이 남한을 점령함으로써 빚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한 간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에 사인을 한 후에라야만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남한은 미군철수와 통일을 연계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남한은 미군철수가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를 실현한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한은 경제 및 무역확대와 문화교류를 선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남북한의 군사대결을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와 무역관계확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는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상, 남북총리회담에서 타결을 본 “남북한 화해, 불가침, 협력과 교류에 관한 협정”은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대화에서의 “창구다원화”(“Multi-windows”) 혹은 “단일창구화”(“single-window”)

남북간의 대화를 위하여 北韓은 대중이 통일의 주도적 세력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정치협의회”, “전민족회의” 등의 창구다원화를 주장한다. 또한 다른 종류의 다양한 회의에서 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대화를 해야하며, 다양한 계층과 모든 정치정당 및 사회기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가능한 빨리 열려서 통일문제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南韓은 대화의 “창구단일화”를 고수하고 있는데, 남북한 정부당국간에만 대화

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남한은 “김일성과의 정상회담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의 개인 견해로는 북한과 남한의 이러한 주장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족통일은 정부간의 일이며 공식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민들과 다양한 정당 및 사회기구들도 일정한 수준에서 광범위한 접촉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2가지 측면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상승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6. 현안 문제

북한과 남한은 통일이 단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근에 고무적인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 것이며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상호간에 강한 불신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그 동안의 세계적인 추세로 인하여 결코 벗어날 수 없었으며 사회체제, 군사, 정치, 경제, 더우기 이념면에서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갈팡질팡 한다거나 후퇴하고 있는 감이 없지않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본다.

(1) 미국은 계획대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가? 1991년말에 국무장관 베이커가 남한을 방문했을 때 당분간 미군철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3월 상원 외무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

보좌관은 미국과 남한이 지역안정을 수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고 간주되는 한에는, 남한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미국과 남한은 대대적인 군사기동훈련을 중지할 수 있는가? “협조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전시훈련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남한과 미국은 1992년 10월에 전시훈련을 재개한다고 공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모든 대화는 종결되어 버렸고 통일논의는 가로막혀 버리고 말았다.

(3) 핵사찰문제 ... 위와같은 조건하에서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사찰허용의 의무를 거부하고 핵확산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6월 11일에 열린 北美회담에서 북한은 조약탈퇴 결정을 유보하고 양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4) 한국의 평화문제 ... 지금의 한반도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아직까지 정전의 상태이다. 북한과 남한은 대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서로에게 강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군사적 대결의 수준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것일 뿐이다.

(5) 상호불신하고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대화를 위한 창구다원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남한은 이것이 연합전선에 불과하다고 의심한다. 남한은 상호접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무역, 문화교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사회에 침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6) 자주적인 통일문제 ... 한국의 통일이 외부의 간섭없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근래에 외부로부터 받는 가장 명백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우기 미국 무장관 베이커는 1991년 11월에 “2+4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북한과 남한 양측이 모두 거부하였다.

7. 中國의 입장

서두에 본인이 언급한대로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왔다. 객관적인 중국의 전략적 조정역할이 한국의 통일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1) 중국자체가 통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대륙과 대만의 관계는 북한과 남한 관계와 차이점이 있으나 분단국가임에는 같다. 중국은 이러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깊이 맛보았고 따라서 한국 국민의 민족통일을 위한 염원을 충분히 이해한다.

(2) 중국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경제, 무역, 투자 분야 등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믿고있다.

(3) 한반도의 통일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보

에 유리한 것이며, 중국이 원하는 바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대국들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한국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 당사국이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

(2) 한반도 지역은 비핵지대화 되어야한다.

(3)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4) 다양한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문화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5)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공개토론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은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지역에서 최후의 미군철수가 이루어질때까지 계획대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서서히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平和政策」의再開: 對北開放 誘導方案

Alexander Zhebin

러시아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

1. 서론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던 소련과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한 지원을 감축함으로써 북한의 지도자들은 비록 기존의 대결적인 선전책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¹⁾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북한당국으로서는 핵개발 카드 이상으로 좋은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또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개방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두개의 문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현상황 하에서 북한의 개방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그와 같은 문제를

1) Tae Hwan Ok, "The Process of South-North Dialogue and Perspectives for 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1, 1992, p.103.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북한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2. 개방유도 방안: 구사회주의권의 사례

한 국가의 개방은 곧 그 국가의 대외관계의 확대를 의미한다. 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국가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혹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서부터 개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국가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북한의 경우 외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개방을 추진하려는 분야는 명백히 경제분야이다.²⁾

경제협력은 일반적으로 특정국에 대한 차관, 무역액, 생산시설 건설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련 기타 동구권 국가의 대북한 경제 협력은 이를 통해 일어난 수천명의 북한 관리, 기술자, 학자, 선생, 군인, 일반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이라는 차원에 더욱 의의가 있다.

북한과의 정치·경제적인 접촉은 또한 양측간의 유례없는 문화적 교류를 일으켰다. 1980년대 후반에 연간 약 50개의 소련 공연단과

2) 고병철, "The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s Domestic Policy," *Korea Observer*, Vol.XX1Y, No.1, spring 1993, pp.17-18; 안병준, "The Possibilities of Change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Xy1, No.3, Autumn 1992, pp.425-427; 유영옥,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Prospects for Change in Its Political Structure," *East Asian Review*, Vol.1Y, No.4, Winter 1992, p.53.

개인이 북한에서 공연했다.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북한의 텔레비전에서는 연간 약 150편의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³⁾

같은 기간동안 기술자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들의 소련 및 유럽 여행은 유례가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우리는 북한사회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즈노스트, 민주화나 여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이나 구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접촉이 그 주된 통로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3. 북한내의 상황

북한의 물질·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경제분야가 개방을 추구하는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재일 조선인과의 합작은 북한경제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부문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의 지도하에 국가가 지원하는 물자·자금·인력과 재일 조선인이 제공한 외화와 기술은 북한에 재벌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⁴⁾

이와 같은 북한의 재벌은 2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로 이들은 북한의 엘리트가 통일한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둘째로 이들은 통일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체제에서 젊은 공산당 테크노크라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훈련장이 되고 있다.

3) Alexander Zbebin,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the State and Prospects," *Sino-Soviet Affairs*, Vol.16, No.3, Autumn 1992, pp.131-132.

4) Murika Tetzeo, "북한-일본의 경협 전망," 「북한투자환경과 남북한 경제협력전개와 과제」, 제3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1993, p.5.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김일성 일족의 생존을 위해서 재벌기업에 보내진 젊은 테크노크라트들이 북한정권이 그들의 생활양식에 가하는 온갖 제약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남한 혹은 서구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들도 그러한 생활양식을 누리고 싶어하고 있다. 그들에게 북한정권은 理想이 아니며 단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그 정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⁵⁾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북한 주민과의 정기적인 접촉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보다 많은 접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른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4. 미래를 위한 무역

북한의 개방과 한국의 통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북한 엘리트의 운명이 북한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개방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어떠한 형태이든 개방은 통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의 엘리트 중 어느 쪽이 통일 한국의 통치자로 남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정치·경제적인 경쟁에서 패배하자 북한의 엘리트들은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남북통일에 있어서

5) Alexander Zhebin, "Pyongyang, Seoul, then Moscow," 동아일보사, 1991, pp.103-104, 153.

의 문제점들은 남북대화의 중요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년 4월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의 「10대강령」은 그러한 맥락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고 생각된다.

통일한국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재산과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제7조와 제10조를 제외하고는 10대강령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⁶⁾ 그러나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조직 (즉 노동당), 혹은 개인 (즉, 통일한국에서 북한경제의 실소유자가 될 북한식 재벌이 될 북한 엘리트들)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새로운 제안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통일한국에서 자신들의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엘리트 내부에 세력균형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가장 활발한 엘리트 그룹은 “정치-사회의 유기체,” “수령과 당과 인민은 일체”라는 선전책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맡겨 놓고, 그들은 통일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심각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5.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利害

정치·군사적 대결을 초래한 러시아 외교정책의 근원이던 교조주의적 이념은 이제 거의 제거되었다.

이제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과거와 같이 국제관계를 이념에 종속시키는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과거 소련이 남한의 존재를 무

6) KCNA, April 6, 1993.

시한 것이 소련의 無知에 의한 정책적 오류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이웃나라인 북한을 무시하는 것 또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이러한 실책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과거 국제관계를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던 것이 「선」과 「악」의 개념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유엔헌장은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써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의 구성원과 정상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둘째, 특정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PLO와 같이 오랜 적대관계를 가진 국가들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현 국제정치적 환경의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3년간 남북한과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넷째, 필요한 수준의 러·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다.

다섯째, 남한과의 급속한 경제관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 접근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북한과의 경제·정치·문화적 교류를 단절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혹은 통일한국과 어떻게 동북아, 두만강, 시베리아 등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스러운 것이다.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며, 이들은 상호 경쟁관계이기 보다는 정치·경

제·문화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엘친 대통령의 최근 서울방문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은 이념에 관계 없이 모든 나라와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⁷⁾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자신의 국익에 입각해서 남북한과 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6. 대북정책 대안

최근 북한과의 관계 및 북한내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은 「평화정책」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설득, 접촉과 대화, 관계의 제도화, 협력, 권고를 의미한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와 보다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과 아울러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모든 수준에서 북한의 정부관리, 학자, 예술인 등과 계속적인 접촉,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쌍무·다자간, 정부·비정부간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 결과 경제, 생태계, 에너지 등 모든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과 궁극적으로 정치, 안보, 군축 등의 문제에 대한 협력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비로소 북한에 대해 그들의 행태와 정책을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7) Izevestia, November 18, 1992.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필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진적, 선택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핵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경직되게 연계하는 정책은 우리를 수동적인 위치에 서게 하며, 그것은 고립을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북한당국이 대내·외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에 일치할 뿐이다.

「평화정책」, 혹은 평화공존정책은 소련이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의 지역·세계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확율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2 회의: 중국, 러시아의 대북한정책

토 론

사회자: 이상우 (서강대 교수)

토론자: 하용출 (서울대 교수)

박두복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최의철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이상우 : 감사합니다. 이제 지정토론을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분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할까합니다. 오늘의 우리 주제가 북한 개방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가 오늘의 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개방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개방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없습니다.

왜 이 논의가 빠지는가 보니까 역시 언어문제가 있습니다. 토론의 편의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이종선생님의 발표에서 통일의 3대원칙에 대해서 상세설명하셨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남북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고 제빈선생께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의 통일원칙에 대해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발생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통일원칙중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한쪽에서는 Peaceful Unification이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방법에 대한 뜻과 Unification for peace라는 평화를 위한 통일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3대원칙중의 평화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사회구성원들이 다함께 공존하고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북한의 2천만 남쪽의 4천만이 서로 다함께 사회구성 속에서 공존하고자 하는 합의가 평화이며 이를 위해 통일한다는 뜻이 우리의 평화원칙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면 우리 통일정책이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두번째 부분인 Unification for peace라는 부분은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통일이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를 아까 이종선생님께서서는 Autonomous로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쓴 자주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Korea Initiative 입니다. 통일에 관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배제하고, 우리 한민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한다는 원칙이 자주통일 입니다. 예를들어 조금전 이종선생님께서 주한 미군이 자주통일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은 제1항인 평화통일과의 관계입니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질서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지 주한미군이 우리의 통일을 도울려고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평화통일의 원칙과 관련되어 논의될 문제이지 자주통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족대단결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소위 National Integration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남북한간의 수형적인 통일이라는 뜻과 사회내에서 계층 계급을 넘어서는 수직적 통일 (vertical Unification) 을 합쳐서 이야기 할때 민족대단결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계급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인민과 남쪽의 인민이 통합하는 것을 민족대단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그것은 수직적 분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민족대단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계급시각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전민족성원이 하나로 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원칙을 그대로 취합하면 통일의 조건은 분명해 집니다. 첫째,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공존에 합의해야만 평화통일이 되고 둘째, 계급사관에 기초한 국제공산주의를 포기해야만 우리의 수직적 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주화와 개방화입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통일의 조건으로서 북한의 개방화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뜻에서의 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할 것인가?, 우리가 물론 해야할 과제입니다만 국제환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 더구나 한반도 주변 4강의 태도를 어떻게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식의 통일을 촉진하는 사회·체제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명토론자 세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서울대학교의 하용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하용출: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

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 변혁기간에 한반도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상의 메시지는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반도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2가지로 나눠서 보면, 하나는 원칙 또는 선언적 차원의 입장과 Context를 고려한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두번째는 Bilateral 이슈로 다루느냐 아니면 Multilateral한 이슈로 다루느냐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발표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발상은 우선 Context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Context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선언적 차원에 국한되었고 두번째로 주로 양자관계에 중점을 두고 Multilateral한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맥락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지만 현재 남북한간에는 국제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핵문제가 걸리고 있는 과정과 핵문제 해결후 어떻게 북한을 개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토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논문들에는 과거의 양국의 입장만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좀더 동적으로 보아서 핵문제가 어떤식으로 풀리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Bilateral과 Multilateral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과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소위 다자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

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너무 양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자 또는 다자간 문제라는 것은 국내문제와도 관계됩니다. 국내에서도 대개의 경우, 통일문제의 한국화와, 남북한 문제의 한국화라는 문제와 국제화라는 견해가 마치도 상반되는 견해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핵문제를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게 상당히 다자간 차원의 문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문제가 가져온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커다란 Side-effect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국내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한반도 문제가 한국화하여 마치 한국 사람 손으로만 해결해야 주체적이라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분위기가 국제적인 분위기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화나 국제화나로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토론할 수 있을 지언정 현실적인 차원은 양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context문제에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크게 국제적인 맥락속에서 남북한간의 신뢰 구축과정으로 전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간에는 물론이고 핵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한반도내지는 동북아지역에서 근원적인 군축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가 단순히 핵문제로 끝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것이 남북한문제의 해결의 전환점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판적인 생각에서 능동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최근에 러시아와 일본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문제가 좀더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남북한, 미국 또는 중국만이 전담해야 하는 형식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문제 또는 남북한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의 균형을 이루는데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자간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자각시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내용은 없는 말입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 냉전시대때의 주권문제에 관한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구체적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중국분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동북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는 한국민이 풀어야 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단기적으로 너무 양자적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중장기적인 차원의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상당히 좌절을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과의 모종의 삼각관계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내문제로 인해 단기적 외교정책을 펴나아가는 것은 동북아 지역 관계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억불을 너무 민족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수업료를 내는 것으로 인식해야겠습니다. 현재는 돈주고 뺏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라는 커다란 수수께끼 푸는데 있어서 아무도 북한내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결과

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분위기 조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떠한 합의나 어떠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국내차원에 있어서 핵문제에 너무 몰두할 것이 아니고 핵문제 진행과정과 핵문제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빈 선생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국내외적으로 일반적으로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견딘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제빈 박사님과 같은 견해가 있는데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서도 제기했듯이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vision이 있는지, 만일 있으면 어떤것인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박두복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박두복: 감사합니다. 앞에서 사회자와 하교수님께서 한반도 통일 문제와 북한 개방문제에 접근해 가는데 있어서 기본 방법론의 자세에 관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 paper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해볼까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중국의 지성을 대표해서 한반도 통일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당위성을 부각시켜 주신 점감사합니다. 이종선선님께서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다루

는데 있어서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환경과 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서 한반도통일 전체 과정에서 지켜져야할 원칙, 현안의 문제,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전망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넓은 분석을 해 주셨고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선생님의 기본적인 분석이나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나 조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positive한 측면에 국한시켜 분석을 했고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환경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 하여 이종 선생은 한반도 통일을 저해해온 냉전체제하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장애물들이 지금은 해소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시고 통일을 위하여 남북 당사국 뿐만아니라 4대강국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요지는 남북한 당사자와 주변 4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이 그러한 positive만 있고 negative한 측면은 없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북당사국의 중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자세가 이종선생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의 자세가 negative한 측면, 통일보다는 체재유지에 치중하여 반통일적 현상유지를 추구해갈 그러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이 최근의 소연방의 붕괴 또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해 감에 따라 북한이 체재위기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북한정책의 우선순위가 통일보다는 체재방어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과거에 견지해 왔던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시

각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조정이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된 예가 작년에 있었던 북한이 남한과 공동으로 UN에 가입했다는 것이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선택이 당시 북한이 직면했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부득이한 결과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말하자면 북한이 남한과 공동으로 UN에 가입했다는 것은 북한이 소위 말하는 정통성상에서 나타나는 주권개념과 그들의 실제적인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간에는 심각한 Gap이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 Gap을 현실화한 것이 바로 북한의 UN가입이 아니냐고 봅니다.

또하나는 이러한 북한의 현상유지적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이 남북한이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 Unit로 했을 경우와 북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휴전선 이북만을 하나의 경제적 Unit로 했을때 그에따라 나타나는 산업발전의 공간적 분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도 남북한을 하나의 Unit로한 산업발전의 공간적 분포는 기존의 남북한의 X축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적인 발전추세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그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휴전선 이북만을 경제적인 Unit로할 경우 산업발전의 공간적 축이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북한의 산업발전의 공간축이 기존의 X축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하나의 조선정책'에 입각한 통일 지향적 정책보다는 오히려 현남북한의 분단을 전체로한 현실유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정책 결정과정이 탈이데올로기화 된다는가 상당히 합리주의를 띠면 될 수록 현상유지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종 선생님의 paper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4강의 정책을 거론하실때 상당히 적극적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 선생님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개진할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이선생님의 paper에서도 나타나듯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한중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수교의정서에서 중국측이 상당히 강조한 부분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주장해 왔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이는 중국이 지향하는 하나의 중국논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에 따라서 남한과의 관계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정책에 조심스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과거의 하나의 조선정책으로부터 한반도의 2개의 실체,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논리, 즉 남북한과 동시에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맺는 대한반도 이분화 정책으로 중요한 정책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지향하는 대한반도 이분화 정책과 하나의 중국이

라는 정책간에는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측이 부각하고 있는 측면이 바로 한반도 통일정책과 중국의 통일정책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직전에 소위 통일문제나 대만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간에 강조되었던 측면은 중국과 한반도의 분단의 배경과 역사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신들이 입각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정책과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분리시킴으로써 대한반도 이분화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대한반도에 대한 이분화정책은 한반도에 2개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현상유지 정책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이분화 정책과 북한이 지향해갈 가능성이 있는 반통일적 현상유지 정책이 결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정책이 결합되면 한반도 통일에 역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종 선생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한·중 수교 이후의 발전과정에서 불균형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관계발전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자간에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 북경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간에 남북한에 대한 정책 또는 태도에 상당히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국과 중국간의 관계발전의 특징은 상당히 불균형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불균형구조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선린관계로 발전해가는 초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의 지도체제가 갖는 성격과 관련되는 어떤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순한 초기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조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한중간의 관계발전에 상당히 비관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불균형구조는 단순한 초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불균형적 성격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 중국의 지도체제가 과거 모택동 체제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상당히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체제는 러시아의 옐친정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옐친의 리더십을 스탈린체제와 완전한 단절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중국의 경우는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해 가면서 모택동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택동체제로부터의 단절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형태가 중국의 리더십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점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불균형 구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지금 중국의 리더십이 모택동체제와의 단절과정이 완전히 이룩되지 못하는 한 모택동체제로부터 물려받은 정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역시 모택동체제의 유산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한국과 중국 간에 나타나는 불균형구조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관계진전을 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현안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계기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중국과 북한간의 기존의 군사동맹관계의 성격 조정문제와, 한국전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대한 중국입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지적한 불균형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중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균형구조가 초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에 대한 이종선생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의철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최의철: 일반적으로 이종선생님이나 제빈박사님은 국제정세변화와 남북한관계 발전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데 두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측의 견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주변 4강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도 이에 적극 동참해서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주셨고 제빈 선생은 현재 폐쇄적이지만 체제 개방움직임을 약간씩 보이고 있어서 교류·협력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특히 북한 핵문제에 관한한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과 인내를 갖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는 남북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4강이 인내를 갖고 설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러한 인내와 설득을 어느정도까지 감수되어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오늘 주제가 북한개방 개혁 유도방안인데 그것에 대한 선결조건은 한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평화질서 유지가 되겠고 여기서 현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북한 핵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분 선생님께 간단히 핵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종, 제빈선생님의 북한 핵문제 해결의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두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전 회의토론에서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고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은 핵문제에 관해서도 협상 대상에 있어서 여러번 태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북한, IAEA, 그 다음에는 미국과만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건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국제적 성격을 띤 문제로서 국제 공조를 필요로 하며 여기에 대한 정책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책의 일관성은 걸음으로는 북한의 주장에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종선생님과 제빈 선생님께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두분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종선생은 paper에서 남북문제에서 북한에 동정적인 또는 선언적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군 철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핵문제로 점진적 철수가 지연, 중단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북실무 회담이나 미북한접촉에서 제3단계회담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또 3단계회담에임해서도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제재논의가 거론될 텐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정부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안보포럼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셨는데 이 포럼의 기능에 대한 구성과 발전전망, 또 향후 지역안보포럼이 진행될 때 북한의 태도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빈선생께서는 두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논문에서 테크노크라트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포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10대 강령중 7조와 10조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이를 통일대비 북한 엘리트의 신변확보 의도 및 북한 엘리트내의 세력 균형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까지 해석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보나 증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고맙습니다. 그럼 발표자 두분께 제기된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종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李琮: 우선 하용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 동의 합니다. 또한 핵문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 관건이라는 점에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준적이 없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한반도 주변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으며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통일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 입장이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남북한간에는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남북한간의 통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만은 유엔에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유엔의 정식회원이며 이점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남한과 중국의 관계인데 경제적으로는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정치적으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한과 중국이 수교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이 원한다면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관계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엘친 대통령은 이전 지도부와의 연계를 끊었으나 중국은 모택동의 노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우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겪은 점에 반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실장께서 제가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동북아 또는 극동의 안보체제에 관하여 저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지지하나 중국 자체는 그 어떤 지배적 입장을 취하려 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 안보체제를 통해 지배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종선생님께서 중국과 대만은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 반면 남북한은 유엔의 정식 회원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논리를 따르다면 1960년도에는 대만이 유엔의 회원국이었던 반면 중국은 회원이 아니었을 때 중국은 대만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제빈박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리는 북한을 비난하거나 대변하는 것보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게 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동구권의 체제변화로 말미암아 북한은 심각한 군사적 위기와 경제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동맹국들을 잃은 반면

남한은 이들국가와 국교정상화를 맺게 되었습니다. 1975년 헨리 키싱저는 주변 4국이 남북한을 교차승인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 인정을 받은 반면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남한의 동료들의 글과 실제상의 통일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관계정상화하는데 있어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한은 지금 북한을 폭격할 것인가 아닌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대안을 취하지 않는다면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을 engage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내부에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을 구명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남한과의 경제적 정치적 경쟁에서 취약한 북한지도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1989년 이후 북한의 정당원, 지식인 등은 북한의 현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응준비는 198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동독의 경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젊은 지도층으로 하여금 통일된 한국에서 삼성과 럭키금성과 같은 재벌회사 사원들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이기택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이종선생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NPT와 연계되면서 미국의 세계정책과 관련이 되는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문서를 보면 대외정책은 언제나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위한 제스처로 핵실험을 한 것인지 미국이 중국을 다룰 수가 있느냐 하는 태도로 핵실험을 한 것인지? 단순히 중국의 올림픽개최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을 하루아침에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핵문제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답변은 종합토론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선생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출: 다음 회의를 위하여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스칼라피노교수와 Zhebin박사가 지적하신대로 북한에 reformist group이 있다면 문제는 현재까지 북한에 접근했던 방법, 예컨대 단기적이고 압박적인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자극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이 변해가는 것을 원하느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간에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있는 reformist group이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면 북한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예컨대 북한이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규정한다면 현재 북한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 그룹이 어떻게 성장해나가고 있느냐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대북한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히 정책적,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어느 한 가지를 따로 떼어내어 독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또는 국내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 또는 양자적인 차원, 다자적인 차원 내지는 행위자가 하나일 경우 또는 여럿일 경우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이며 연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토론의 의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하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종합토론의 의제로 삼기로 하고 두번째 회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 면

第3會議

綜合討論一向後 對北韓政策 推進方向

빈 면

제3회의: 종합토론 - 향후 대북한정책 추진 방향

토 론

사회자: 한배호 (고려대 교수)

토론자: 1, 2회 토론자 및 발표자 전원

사회: 제3회의에서는 한국이 대북한정책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 option이 무엇이나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회의를 통하여 이문제가 언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집중적으로 이문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표자에게 이문제에 대하여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자중에서도 이문제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2회의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발표하신 분들이 대체로 한가지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서로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칼라피노교수는 강경이나 온건이나, 협상이나 제재나 양극단을 놓고서 양극단의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

나라 두개를 병행해 가는 유연한 전략이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오카자키 대사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면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협상에 임하든 어떠한 핵개발을 해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앞으로 남북간의 대화는 이와같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현실론,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스칼라피노교수와 오카자키대사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분은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李琮선생은 북한이 nuclear free zone이 되어야 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 Zhebin박사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방은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지향적인 정권으로 변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그러한 개혁이 가능한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개혁이 북한에서 있다면 어떠한 시간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전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time framework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 나름대로 토론과 발표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4분이 먼저 북한의 개방을 위하여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칼라피노: 대북한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현실문제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가하는데 있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장애요인이 있는가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남한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 모든 문제에 대해 제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문제는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은 붕괴할 것이며 그 누구도 이 조약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핵무기개발에 대한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점을 계속해 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반대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을 경계시킬 것이며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동북아에서 발을 뺀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도 주한미국의 철수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때 우리는 유인과 억제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정책의 지속은 곧 억제정책의 배경이 아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 문제의 해결이 될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남한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종합할 수 있는 유인과 억제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금년 9월에 북한은 을

지포커스 훈련과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에서 탈퇴하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그 어떤 나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남한과 주변 4국이 맡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앞으로 양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의 양보를 통하여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까자끼: 일본의 대남북한 정책은 미국과 남한과의 협조관계로 이루어지며 남한의 정책에 전폭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필요로하며 이 동맹은 아태지역의 평화에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중요합니다. 일본에 대한 공격은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실린관계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모든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될 경우 그 비용 부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남한이 보다 강력한 억제정책을 취하고 자 한다면 남한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럴때도 일본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제빈: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김일성 정권을 더욱 공고화시킨다는 견해가 있는데 경제협력은 이중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구소련의 경우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의 통제가 불가능 하게 되며 결국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내부에 경제협력을 바라며 북한의 변화를 갈망하는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통일한국에 대비한 산업기반의 확충과 제반 여건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핵문제는 물론 국제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은 핵개발을 추진중이라 의심되는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약 15국이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유엔보고서 내용입니다.

북한이 현재 염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핵무기는 통일시 남한에 대해 동등한 입장을 갖기 위한 지렛대인 것입니다.

북한의 소비수준은 남한과 비교도 안될만큼 저조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라도 북한 주민생활의 질적 변화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낮은 소비수준을 유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때문에 경제제재의 효과는 더욱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李琮: 먼저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한간 통일문제에 관한 토론문제를 놓고 볼때 중국의 입장은 불안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대화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남북한 관계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쌍방관계는 많은 진전을 보였다고 봅니다. 남북한 회담은 중단되었지만 협상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은 중요합니다. 남북한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세기동안의 불신과 반목과정에 놓여 있었던 남북한 문제는 단시간내에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대화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진전이 있다고 너무 낙관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북한은 IAEA 핵사찰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찰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북한의 태도는 모순적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북한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며 결국 IAEA와 미국과 협상에 임하게 되리라 봅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제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지만 목적을 달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재가 가벼운 제재일 경우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강경한 제재는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로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로 들 수 있는데 제재의 결과 북한주민의 김일성체제에 대한 복종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경제제재와는 배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가능성은 북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뿐아니라 정치적 혼란으로 남한, 중국 등에 대량의 난민 유출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으로 원래의 목표와는 배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북한주민의 단결을 위한 것으로 보는데 저

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북한주민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방은 전세계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회피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의 개방은 속도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과거의 소련 모델과 같은 개방은 북한 사회의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혼란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식 개방모델은 중국에게 많은 혼란과 사회불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더욱 바람직 합니다. 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게 된 이유는 과거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책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신아시아개발국과 같이 개방을 통해 대발전을 이룩한 교훈을 따라 중국도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역시 북한도 개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한국도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도 역시 학자로서 중국정부가 핵실험을 결정하는데 참가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학자입장에서 분석을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정부성명에 의하면 중국의 핵무기는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핵무기는 소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준수하였습니다. 중국의 핵무기는 소량이며 미국의 핵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앞

으로 중국은 어느나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볼때 미국과 원만한 관계가 아닌 시점이었다는 점은 동의 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판매한 것과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2000년 북경 올림픽개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를 판매하였고 금년에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하호 화물선이 화학무기 원료를 적재하고 중동지역에 순항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가 중국에 와서 인권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순에는 APEC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교수: 5분이내로 간략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북한의 개방입니다. 첫째 문제는 개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개방은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지키겠다는 국제책임의 인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가지가 북한체제 개방의 요건이고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회담을 통해서 풀다고 하는 것은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나 북한의 기준도 따를 수 없으니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국제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

이 우리가 북한의 개방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북한이 개방을 할 것인가? 북한이 여러가지 이유로 현존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경제건설을 할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면 개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을 하면 대외개방은 하지만 대내개방은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어떻게 하면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북한을 다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가면 정확하게 보상을 하고 반대로 가면 정확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북한의 개방이 촉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개방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북한과 여러가지 합의를 보았습니다. 기본조약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셈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의한 기본조약을 북한도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도 더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조약만 실행된다고 한다면 오늘에 거론되고 있는 특사교환은 필요없는 회담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역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되고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정책과 북한에 대한 요구와 거기에 따르는 조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북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천명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한간에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평화보장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한 미군이 존재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자주통일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핵문제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되어야 합니다. 북한에게 정확하게 통고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안가지는 것보다 월등히 손해를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북한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때 핵문제는 바로 다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강경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북한의 2천만 주민의 안위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조금 강경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하용출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용출교수: 이상우교수께서 간결하게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남한에서 응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엇이나 하는 점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6공 때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중국의 카드, 내부적으로는 기본합의서의 채택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사용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카드가 남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남한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문제가 풀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외교정책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핵문제같이 대서방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내의 여러조직이 한가지 문제로 동시에 외부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칼라피노교수나 Zhebin선생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한내부에 개혁파가 존재한다면 핵문제가 풀리는 과정의 성격에 따라 개혁파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음흉한 의도라기 보다는 북한이 서서히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문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경제적인 방법만 가지고 북한을 유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오히려 비경제적인 수단, 정치/군사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관계와 남북한 관계

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가 얽혀들어가게 되면 북한이 원하지 않는 페이스에서 남북한관계를 전개시켜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북한은 가능한한 자기의 페이스대로 남북한관계를 진전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대를 바라는 것은 대미관계를 최대한 증진시키면서도 남한과의 관계에서 물리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라는 것이 북한이 제의하는 경우 우리가 거의 거절한 적이 없는데도 거의 성과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번쯤은 북한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빈: 북한의 젊은 관료엘리트들은 정치적 변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최소한 5년동안의 교육을 소련에서 받았으며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토이카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력을 장악해도 북한의 군부가 정권을 잡아도 남북한의 관계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동독의 경험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신속한 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칼라피노: 남한에 뉴욕과 제네바 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성명을 잘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은 공정한 핵사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6

월11일 성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핵확산금지조약 레짐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NPT문제는 특별한 문제입니다. 우리모두가 이를 파기하자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NPT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핵사찰을 받아야 하며 NPT의 제반 조약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李琮: 먼저 북한내부의 정치혼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가능성의 문제였고 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난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보다 남한에 보다 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북한의 친척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한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변혁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대변혁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은 경제문제일 수도 있으나 여타 나라의 경우의 예를 보면 정치문제가 더욱 큰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경험으로 볼때 경제적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나 정치적 개혁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나라의 교훈을 생각해서입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기간 동안 봉건사회를 유지해 왔으나 민주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동안의 봉건사회의 경험때문에 단시일내에 민주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 모택동 주석께서도 말한것과 같이 중국은 민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볼 때 정치개혁은 자기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개혁조치를 취하되 정치적으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개혁도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모델을 그냥 수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민족통일연구원 주관의 제3회 국제학술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附錄：會議概要>

會議日程

10月 18日(月)

09:00-09:40 登 錄

開 會 式

09:40-09:45 開 會 辭：李秉龍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09:45-10:00 基調演說：韓完相 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한반도 통일과 周邊國의 役割”

第1會議：美國, 日本의 對北韓政策

10:00-12:00

- 司 會：韓培浩(高麗大 教授)
- 發 表：로버트 스칼라피노(버클리大 教授)
“美·北韓 關係：不確實한 未來”
히사히코 오카자키(前 泰國駐在 日本大使)
“北韓 核問題에 對한 一考”
- 討 論：李基鐸(延世大 教授)
朴慶緒(中央大 教授)
玉台煥(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長)

午 餐

12:00-13:30

第2會議：中國, 러시아의 對北韓政策

13:30-15:30

- 司 會：李相禹(西江大 教授)
- 發 表：李 琮(中國社會科學院 世界政治·經濟
研究所 所長)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統一에 대한
見解”

알렉산더 제빈(러시아 極東問題
연구소 研究委員)
“「平和政策」의再開:對北 開放
誘導方案”

- 討 論: 河龍出(서울大 教授)
朴斗福(外交安保研究院 教授)
崔宜喆(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Coffe Break

15:30-15:50

第3會議: 綜合討論 - 向後 對北韓政策 推進 方向

15:50-17:50

- 司 會: 韓培浩(高麗大 教授)
- 討 論: 第 1, 2 會議 參加者 全員

參加者名單

- 基調演說
韓完相(副總理 兼 統一院 長官)
- 司會者
韓培浩(高麗大 教授)
李相禹(西江大 教授)
- 發表者
로버트 스칼라피노(버클리大 教授)
히사히코 오카자키(前 泰國駐在 日本大使)
李 琮(中國社會科學院 世界政治·經濟研究所 所長)
알렉산더 제빈(러시아 極東問題研究所 研究委員)
- 討論者
李基鐸(延世大 教授)
朴慶緒(中央大 教授)
玉台煥(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長)
河龍出(서울大 教授)
朴斗福(外交安保研究院 教授)
崔宜喆(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長)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資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세미나시리즈 93-04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5월 일

發行日 1993년 9월 일
